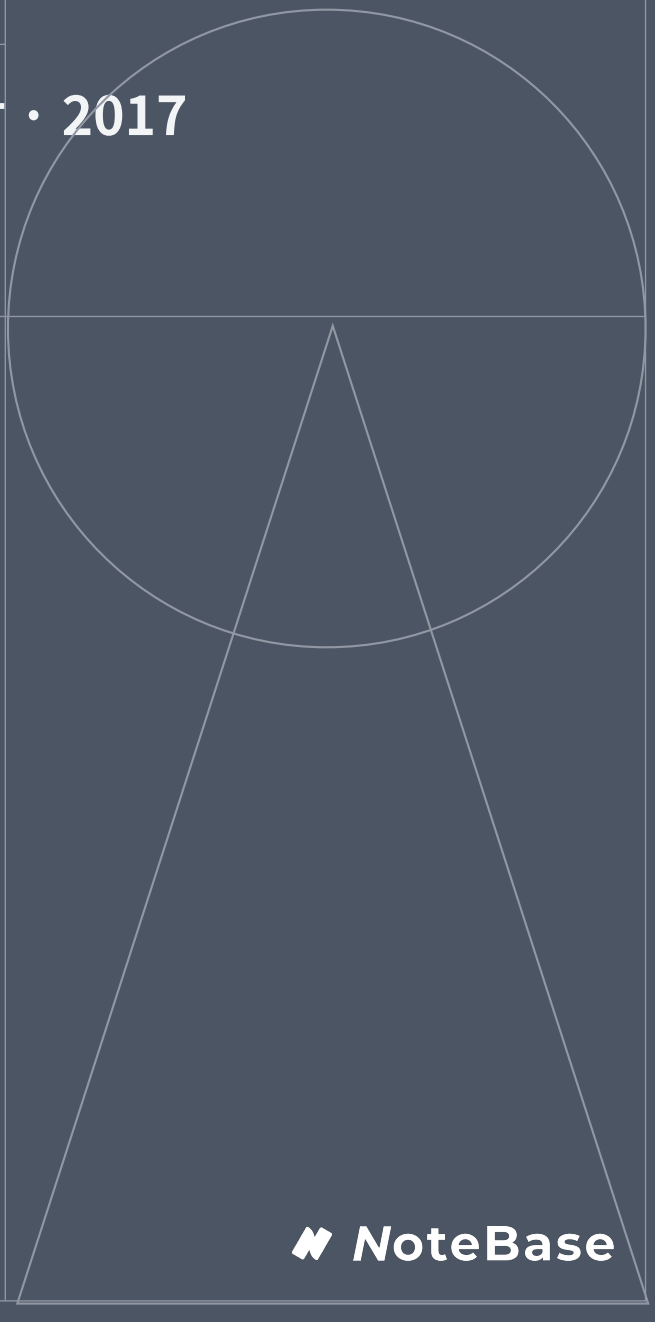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17

공무원/국가직/7급 · 경제학 · 2017

문 1.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만, 아내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전기의 시장가치에서 공해의 시장가치를 뺀 것이 GDP에 포함된다.

③ 임대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자가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A와 B가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각각 임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한 경우, A와 B 중 한 사람의 임금만 GDP에 포함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이 문제는 GDP 집계 원칙 중에서도 시장거래를 통해 가치가 매겨지는 활동만 포함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가사노동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점과, 예외적으로 자가주택의 귀속임대료처럼 추정하여 포함시키는 항목을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시장거래 원칙: GDP는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져 거래된 재화와 서비스만 집계한다. 그래서 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처럼 대가를 받고 거래되는 것은 GDP에 포함되지만, 가정주부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가사노동처럼 시장을 거치지 않는 활동은 시장가치를 매길 수 없어 GDP에서 제외된다.
외부불경제(공해)의 미반영: GDP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만 더하는 것이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등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의 비용을 빼지 않는다. 즉 전기의 시장가치는 그대로 GDP에 포함되고, 공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GDP 계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귀속임대료(imputed rent): 자가주택도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유사한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귀속임대료를 GDP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임대료뿐 아니라 자가주택의 귀속임대료도 GDP에 포함된다.
가사도우미 임금의 상호 지불: A와 B가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각각 임금을 지불하기로 했다면, 이는 시장을 통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A가 받은 임금과 B가 받은 임금 모두 GDP에 포함된다(둘 중 한 사람의 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는 시장에서 대가를 받고 거래되므로 GDP에 포함되고, 아내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는 시장거래가 아니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GDP의 시장거래 원칙을 정확히 서술한 것이므로 옳다.
② 발전소가 만든 전기의 시장가치는 그대로 GDP에 포함되며, 공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빼지 않는다. 시장가치에서 공해의 시장가치를 뺀 것이 GDP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린 표현이다 → 전기의 시장가치 전액이 GDP에 포함되고 공해 비용은 차감되지 않는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③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뿐 아니라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도 귀속임대료로 추정되어 GDP에 포함된다.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표현이다 → 자가주택의 주거서비스도 귀속임대료로 GDP에 포함된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④ A와 B가 서로 아이를 돌봐주고 각각 임금을 지불했다면 이는 시장거래를 통한 대가 지불이므로 A와 B 각자가 받은 임금이 모두 GDP에 포함된다. 한 사람의 임금만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린 표현이다 → A와 B 두 사람의 임금이 모두 GDP에 포함된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GDP가 부정적 외부효과(공해)의 비용을 차감한 순가치라고 착각하는 경우 고르기 쉽다. GDP는 시장가치의 합일 뿐 외부불경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③은 자가주택의 귀속임대료를 GDP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으면 고르게 된다. 임대주택이든 자가주택이든 주거서비스는 모두 GDP에 포함된다.
④는 아이 돌봄이 가사노동이라 GDP에서 제외될 것 같다는 직관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사례는 서로 임금을 지불하는 시장거래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불된 임금은 모두 GDP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어떤 활동이 시장을 통해 대가가 오갔는지부터 확인한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자원봉사 등은 GDP에서 제외되고, 대가가 오간 거래는 형태와 무관하게 GDP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판단한다. 아울러 GDP는 외부불경제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과 자가주택 귀속임대료는 포함된다는 두 가지 예외 규칙을 함께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GDP는 시장가치의 합이며 외부불경제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가주택 귀속임대료는 GDP에 포함되고, 가사노동·자원봉사처럼 대가 없는 활동은 GDP에서 제외된다는 네 가지 포인트를 짝지어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2. 다음은 A국의 15세 이상 인구 구성이다. 이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 임금근로자: 60명
◯ 무급가족종사자: 10명
◯ 직장은 있으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10명
◯ 주부: 50명
◯ 학생: 50명
◯ 실업자: 20명 (단, 주부와 학생은 모두 부업을 하지 않는 전업 주부와 순수 학생을 나타낸다)

① 경제활동참가율: 40%, 실업률: 20%
② 경제활동참가율: 50%, 실업률: 25%
③ 경제활동참가율: 40%, 실업률: 25%
④ 경제활동참가율: 50%, 실업률: 2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로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공식에 각 인원을 올바르게 대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특히 일시휴직자는 취업자로, 전업 주부와 순수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임금근로자 60명은 취업자이다. 무급가족종사자 10명도 취업자로 분류된다(무급가족종사자는 주당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된다). 직장은 있으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 10명은 일시휴직자로서 취업자에 포함된다. 주부 50명과 학생 50명은 각각 부업이 없는 전업 주부·순수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실업자 20명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이다.

사용할 공식

취업자 수 = 임금근로자 + 무급가족종사자 + 일시휴직자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NoteBase

계산 과정

취업자 수를 먼저 구하면 $60 + 10 + 10 = 80$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값이므로 $80 + 20 = 100$명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에 비경제활동인구(주부 50명, 학생 50명)를 더한 값이므로
$100 + 50 + 50 = 200$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frac{100}{200} \times 100 = 50\%$이다.
실업률은 $\frac{20}{100} \times 100 = 20\%$이다.

선지 판단

① 경제활동참가율 40%, 실업률 20%: 경제활동참가율이 틀렸다 →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X
② 경제활동참가율 50%, 실업률 25%: 실업률이 틀렸다 → 실업률은 20%이다. X
③ 경제활동참가율 40%, 실업률 25%: 두 수치 모두 틀렸다 → 경제활동참가율 50%, 실업률 20%이다. X
④ 경제활동참가율 50%, 실업률 20%: 계산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O

오답 포인트

①·③은 15세 이상 인구를 200명이 아닌 다른 값(예: 실업자를 취업자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비경제활동인구를 잘못 더한 경우)으로 계산해 경제활동참가율을 40%로 잘못 산출한 경우이다. ②·③은 실업률 계산 시 분모를 경제활동인구(100명)가 아닌 15세 이상 인구(200명) 등으로 잘못 잡아 25%로 산출한 경우이다. 실업률의 분모는 항상 경제활동인구이지 전체 인구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시휴직자를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잘못 분류하면 취업자 수 자체가 달라져 전체 계산이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시된 인원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세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때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시휴직자는 취업자, 전업 주부와 순수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라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그다음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를 구하고,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해 15세 이상 인구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고,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분모를 서로 바꾸지 않도록 유의한다.

암기 포인트

취업자에는 임금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일시휴직자가 포함된다. 전업 주부와 순수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이고,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다.

NoteBase

문 3. 다음은 경제통합 형태에 대한 내용이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가맹국 간에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나) 가맹국 간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원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다) 가맹국 간에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만,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① (가) 자유무역지역, (나) 관세동맹, (다) 공동시장
② (가) 자유무역지역, (나) 공동시장, (다) 관세동맹
③ (가) 관세동맹, (나) 자유무역지역, (다) 공동시장
④ (가) 관세동맹, (나) 공동시장, (다) 자유무역지역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경제통합의 단계별 심화 정도(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에 따라 역내 상품·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 범위와 역외 관세 부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건은 두 가지 기준이다. 첫째, 역외 국가에 대한 관세를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매기는지 공동으로 매기는지, 둘째, 자유로운 이동이 상품에만 한정되는지 노동·자원 같은 생산요소까지 확장되는지이다.

핵심 개념

자유무역지역(FTA)은 가맹국 간 상품 관세만 철폐하고, 역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율을 유지한다(개별 관세).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의 특징에 더해 역외 수입품에 대해 가맹국이 동일한 공동관세를 부과하지만, 생산요소의 이동은 자유화 대상이 아니다(상품만 자유 이동+공동관세).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의 특징에 더해 노동,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한다(상품·생산요소 모두 자유 이동+공동관세). 즉 심화 순서는 자유무역지역(개별관세, 상품만) → 관세동맹(공동관세, 상품만) → 공동시장(공동관세, 상품+생산요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가맹국 간 상품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 수입품에는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므로 자유무역지역에 해당한다.
(나)는 상품뿐 아니라 노동, 자원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하고 역외 수입품에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므로 공동시장에 해당한다.
(다)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만 보장하고 역외 수입품에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므로 관세동맹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자유무역지역, (나)=공동시장, (다)=관세동맹으로 연결한 ②가 옳다.
① (나)를 관세동맹, (다)를 공동시장으로 바꿔 놓아 두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으므로 틀리다.
③ (가)를 관세동맹, (나)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연결해 개별관세/공동관세 여부를 뒤바꾸었으므로 틀리다.
④ (가)를 관세동맹, (다)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연결해 역외 관세 부과 방식과 생산요소 이동 여부를 모두 뒤바꾸었으므로 틀리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혼동은 (나)와 (다)를 맞바꾸는 것이다. 두 설명 모두 역외 수입품에 공동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은 같지만, (나)만 노동·자원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을 언급하므로 이 문구의 유무로 공동시장과 관세동맹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가)의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문구를 놓치면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역외 관세가 개별적인지 공동인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체크한다. 첫째, 역외 관세가 개별 부과인지 공동 부과인지(개별이면 자유무역지역, 공동이면 관세동맹 또는 공동시장). 둘째, 생산요소(노동·자본·자원)의 자유 이동 언급이 있는지(있으면 공동시장, 없으면 관세동맹). 이 두 기준만 적용하면 세 개념이 자동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자유무역지역: 상품관세 철폐+역외 개별관세. 관세동맹: 상품관세 철폐+역외 공동관세. 공동시장: 관세동맹+생산요소(노동·자본) 자유이동. 심화 순서로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4.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각 제품을 별도의 개별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보다 생산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은?

① 범위의 경제
②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③ 규모의 경제
④ 비경합적 재화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여러 제품을 한 기업이 함께 생산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과, 한 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 비용이 절감되는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발문의 핵심은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데서 생기는 비용 절감이라는 점이다.

핵심 개념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는 한 기업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때의 총비용이, 각 제품을 별도의 기업이 따로 생산할 때의 비용 합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생산요소나 설비, 기술을 여러 제품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는 한 제품의 생산량 자체를 늘릴 때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생산 규모에 관한 개념이다.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은 모든 생산요소를 동일 비율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그 비율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생산함수상의 성질로,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비용 개념 자체는 아니다. 비경합적 재화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재화의 성질로, 공공재 논의에서 쓰이는 개념이며 여러 제품 동시 생산의 비용 문제와는 무관하다.

선지별 해설

① 범위의 경제 — O. 여러 제품을 한 기업이 함께 생산할 때의 비용이 개별기업이 따로 생산할 때보다 적게 드는 경우를 정확히 설명하는 개념이다.
②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 X. 이는 생산요소 투입 비율과 산출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생산함수상의 개념으로,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의 생산 규모 확대에 관한 것이다.
③ 규모의 경제 — X. 하나의 제품 생산량을 늘릴 때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으로,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④ 비경합적 재화 — X. 소비의 경합성 여부에 관한 재화의 성질이며, 생산비용의 절감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혼동하기 쉬운데, 규모의 경제는 '한 제품의 생산량'이 늘 때의 비용 변화이고 범위의 경제는 '제품의 다양성(종류 수)'이 늘 때의 비용 변화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은 비용 개념이 아니라 생산함수의 성질이라는 점에서 범위의 경제와 다른 층위의 개념임을 유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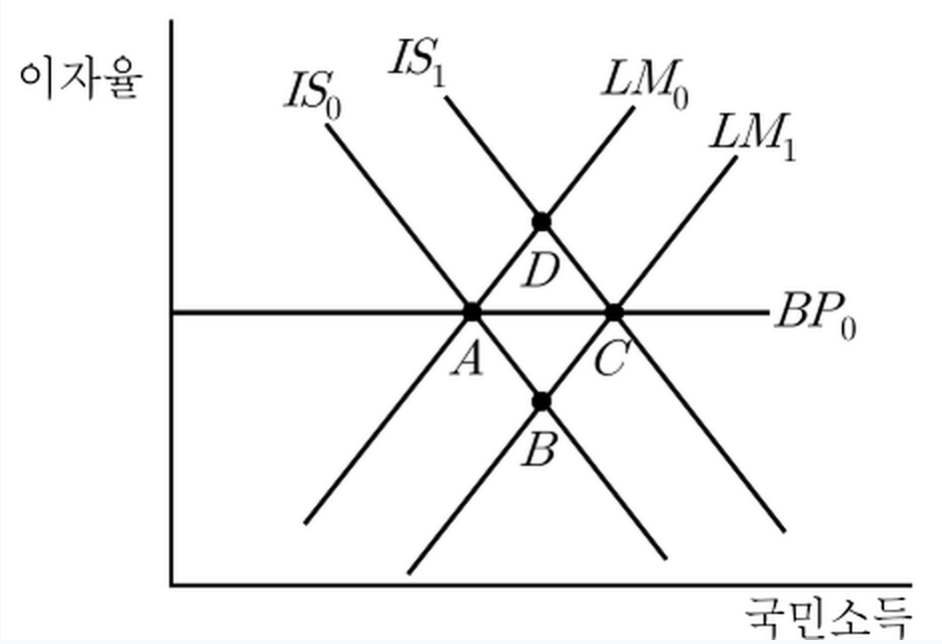
발문에서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범위의 경제를, '한 제품의 생산량을 늘릴 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규모의 경제를 떠올린다. 키워드가 제품의 종류인지 생산량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빠르게 답을 좁힐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범위의 경제=제품 종류(공동생산), 규모의 경제=생산량(단일제품),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생산함수 성질로 구분해 정리해 둔다.

NoteBase

문 5. 다음 그림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를 나타낸다. IS_0, LM_0, BP_0 곡선이 만나는 점 A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동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A이다.

② 변동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D이다.

③ 고정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C이다.

④ 고정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B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서, 환율제도(고정 vs 변동)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IS-LM-BP 그래프의 균형점 이동으로 정확히 짚어내는 문제이다. 핵심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우면 장기 균형은 반드시 BP0 곡선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정책 시행 직후 균형이 BP0에서 벗어나면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른 자본이동과 환율(또는 통화량) 조정을 거쳐 결국 BP0 위의 점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먼저 원래 균형 A는 IS0, LM0, BP0가 동시에 만나는 점으로 BP0 위에 있다. 재정정책을 확장하면 IS0가 오른쪽 IS1로 이동하고, 통화량은 아직 그대로이므로 일시적 균형은 IS1과 LM0의 교점인 D로 이동한다(BP0보다 위, 즉 국내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보다 높은 상태). 통화정책을 확장하면 LM0가 오른쪽 LM1로 이동하고, 일시적 균형은 IS0와 LM1의 교점인 B로 이동한다(BP0보다 아래, 즉 국내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보다 낮은 상태). IS1과 LM1이 만나는 C는 다시 BP0 위에 있으므로, 두 정책이 함께(또는 조정 과정을 거쳐) 작용했을 때 도달하는 새로운 장기 균형점이 된다. 이제 각 점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동의 방향과, 변동환율제·고정환율제 각각에서 그 자본이동이 환율 변화로 흡수되는지 통화량 변화로 흡수되는지를 따라가면 각 선지의 최종 균형점을 판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변동환율제 하 확장적 재정정책: IS0가 IS1로 이동해 일시적으로 D(BP0보다 위, 국내 이자율 > 세계 이자율)에 도달한다. 국내 이자율이 높아 해외 자본이 유입되고, 변동환율제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이 없으므로 자국 통화가 절상된다. 통화 절상은 순수출을 감소시켜 IS1을 다시 왼쪽 IS0로 되돌리므로, 최종 균형은 원래의 A로 복귀한다. 옳은 설명이다(O).

② 변동환율제 하 확장적 통화정책: LM0가 LM1로 이동해 일시적으로 B(BP0보다 아래, 국내 이자율 < 세계 이자율)에 도달한다. 국내 이자율이 낮아 자본이 유출되고, 변동환율제에서는 자국 통화가 절하된다. 통화 절하는 순수출을 증가시켜 IS0를 오른쪽 IS1로 이동시키므로, 최종 균형은 IS1과 LM1이 만나는 C가 된다. 새로운 균형이 D라는 설명은 틀렸다 → D가 아니라 C이다(X).

③ 고정환율제 하 확장적 통화정책: 일시적으로 B(국내 이자율 < 세계 이자율)에 도달하며 자본이 유출되어 자국 통화의 절하 압력이 생긴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을 매입(자국 통화 매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통화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통화량 증가 자체가 환율 방어를 위해 다시 흡수되어 LM1이 원래의 LM0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최종 균형은 다시 A가 된다. 새로운 균형이 C라는 설명은 틀렸다 → C가 아니라 A이다(X).

④ 고정환율제 하 확장적 재정정책: 일시적으로 D(국내 이자율 > 세계 이자율)에 도달하며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 통화의 절상 압력이 생긴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을 매도(자국 통화 매입 대신 자국 통화를 공급)하면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LM0가 오른쪽 LM1로 이동한다. 최종 균형은 IS1과 LM1이 만나는 C가 된다. 새로운 균형이 B라는 설명은 틀렸다 → B가 아니라 C이다(X).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정책 시행 '직후'의 일시적 균형(D 또는 B)과 자본이동·환율(통화량) 조정을 모두 거친 '최종' 균형을 혼동하는 것이다. D와 B는 BP0에서 벗어난 점이므로 결코 장기 균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다르다는 점(변동환율제는 환율이 움직여 IS가 이동하고, 고정환율제는 통화량이 움직여 LM이 이동함)을 뒤바꿔 생각하면 ②·③·④를 정답으로 오인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원래 균형이 BP0 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정책에 따라 IS 또는 LM이 이동한 직후의 임시 균형이 BP0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표시한다. 그다음 변동환율제인지 고정환율제인지에 따라 어떤 곡선(IS 또는 LM)이 추가로 이동해 다시 BP0 위로 돌아오는지를 따라가면 정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변동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무력화되고 통화정책이 유효하며, 고정환율제에서는 그 반대라는 결론이 항상 확인된다.

암기 포인트

변동환율제: 재정정책 무력(원래 균형 A로 복귀), 통화정책 유효(새 균형 C로 이동). 고정환율제: 통화정책 무력(원래 균형 A로 복귀), 재정정책 유효(새 균형 C로 이동). 장기 균형은 항상 BP0 곡선 위에 있다는 원칙을 함께 외워 둔다.

NoteBase

문 6. 생산함수가 $Y = L^{2/3}K^{1/3}$인 경제의 저축률이 s, 감가상각률이 δ이다. 인구증가나 기술진보가 없다고 가정할 때,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생산량을 s와 δ의 함수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s/\delta)^{1/3}$

② $(s/\delta)^{1/2}$

③ $(s/2\delta)^{1/3}$

④ $(s/2\delta)^{2/3}$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주어졌을 때,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정상상태(steady state)의 1인당 자본과 1인당 생산량을 저축률 s와 감가상각률 δ의 함수로 도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본의 생산탄력성(지수)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출발점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는 $Y = L^{2/3}K^{1/3}$이다. 양변을 L로 나누면 1인당 생산함수를 얻는다. $y = Y/L$, $k = K/L$라 하면 $y = \frac{L^{2/3}K^{1/3}}{L} = \left(\frac{K}{L}\right)^{1/3} = k^{1/3}$이다. 즉 자본의 지수(자본소득분배율)는 1/3이다.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이 모두 0이므로 1인당 자본의 변화식은 $\dot{k} = sy - \delta k$이고, 정상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이 더 이상 변하지 않으므로 $\dot{k} = 0$이 성립한다.

사용할 공식

정상상태 조건: $sy^* = \delta k^*$, 즉 저축(투자)과 감가상각이 일치한다. 1인당 생산함수 $y = k^{1/3}$를 대입하면 $sk^{*1/3} = \delta k^*$가 된다.

계산 과정

$sk^{*1/3} = \delta k^*$의 양변을 $k^{*1/3}$으로 나누면 $s = \delta k^{*1-1/3} = \delta k^{*2/3}$이다. 이를 $k^{*2/3}$에 대해 정리하면 $k^{*2/3} = \frac{s}{\delta}$이고, 양변에 3/2 제곱을 하면 $k^* = \left(\frac{s}{\delta}\right)^{3/2}$이다. 이제 이 값을 1인당 생산함수 $y = k^{1/3}$에 대입한다. $y^* = (k^*)^{1/3} = \left(\left(\frac{s}{\delta}\right)^{3/2}\right)^{1/3} = \left(\frac{s}{\delta}\right)^{\frac{3}{2}\times\frac{1}{3}} = \left(\frac{s}{\delta}\right)^{1/2}$이다. 따라서 정상상태의 1인당 생산량은 $\left(\frac{s}{\delta}\right)^{1/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s/\delta)^{1/3}$: X — 지수가 1/3이 되려면 자본지수가 1/2인 생산함수여야 한다. 이 문제의 자본지수는 1/3이므로 지수가 다르다.
② $(s/\delta)^{1/2}$: O — 계산 과정에서 도출한 정상상태 1인당 생산량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s/2\delta)^{1/3}$: X — 감가상각률에 불필요하게 2를 곱했다. 자본축적식에 인구증가율이 0으로 주어졌으므로 δ 앞에 다른 계수를 붙일 근거가 없다.
④ $(s/2\delta)^{2/3}$: X — ③과 같은 이유로 2δ로 잘못 나타냈고, 지수도 2/3으로 자본지수를 그대로 옮겨 적은 오류이다(정답은 자본지수가 아니라 $\alpha/(1-\alpha)$ 형태의 지수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1인당 생산함수의 지수 1/3을 그대로 정상상태 1인당 생산량의 지수로 옮겨 적는 것이다(①, ④의 함정). 정상상태 1인당 생산량의 지수는 자본지수 α가 아니라 $\frac{\alpha}{1-\alpha}$ 형태로 바뀐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또한 이 문제에는 인구증가율·감가상각률에 어떤 배수(2 등)도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δ 앞에 2를 곱한 ③, ④는 처음부터 조건에 없는 수치를 임의로 넣은 오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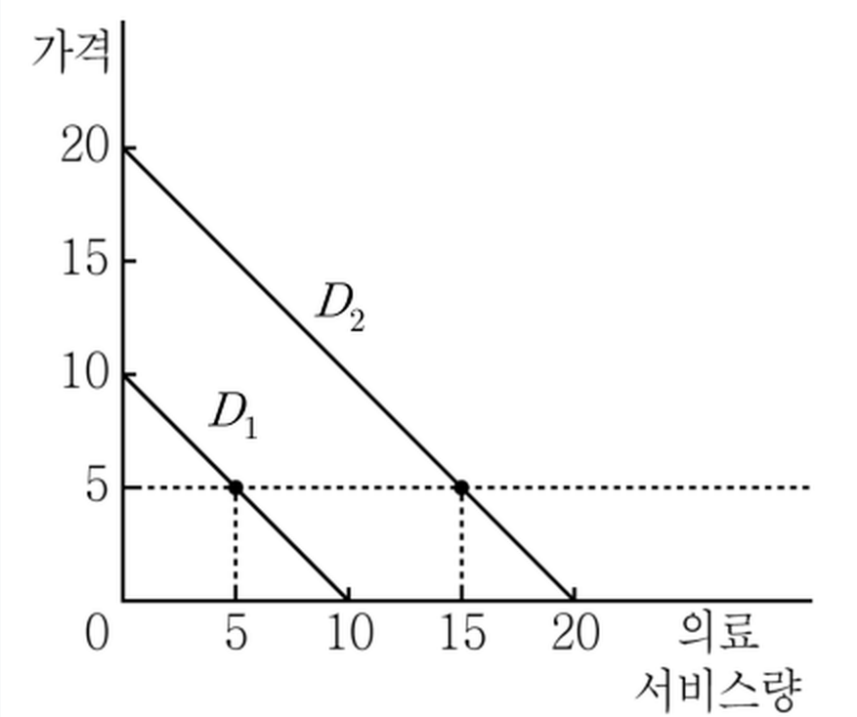
생산함수 $Y = L^{1-\alpha}K^{\alpha}$ 형태가 주어지면 먼저 자본지수 α를 정확히 확인한다. 정상상태 조건 $sk^{\alpha} = \delta k$를 세우고 $k^{*} = (s/\delta)^{1/(1-\alpha)}$를 구한 뒤, 1인당 생산량 $y^{*} = (k^{*})^{\alpha} = (s/\delta)^{\alpha/(1-\alpha)}$로 마무리하는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 문제처럼 $\alpha = 1/3$이면 지수는 $\frac{1/3}{2/3} = 1/2$이 된다는 것을 공식처럼 기억해 둔다.

암기 포인트

정상상태 1인당 생산량의 지수 공식: $y^{*} = \left(\frac{s}{\delta}\right)^{\alpha/(1-\alpha)}$ (단, α는 자본의 생산탄력성). $\alpha = 1/3$이면 지수는 1/2, $\alpha = 1/2$이면 지수는 1이 되는 식으로, 자본지수만 확인하면 지수를 바로 계산해 낼 수 있다.

NoteBase

문 7. 다음 그림은 보통사람과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곡선을 나타낸다. 보통사람의 수요곡선은 D_1, 중증환자의 수요곡선은 D_2일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통사람은 가격 5에서 탄력성이 -1이다.

② 중증환자는 가격 5에서 탄력성이 $-\frac{1}{3}$이다.

③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병원은 보통사람보다 중증환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④ 가격 5에서 가격 변화율이 동일할 경우 보통사람이나 중증환자 모두 수요량의 변화율은 동일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그래프에서 두 수요곡선의 방정식을 직접 읽어내고, 가격 5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탄력성 차이가 독점기업의 가격차별(그룹별 가격 설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선지 ④는 탄력성이 서로 다른 두 그룹에서 가격 변화율이 같을 때 수량 변화율도 같은지를 묻는데, 이는 앞서 구한 탄력성 값을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 정리

D1(보통사람): 그래프에서 가격절편 10, 수량절편 10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P = 10 - Q_1$, 즉 $Q_1 = 10 - P$이다. 가격이 5일 때 $Q_1 = 5$이다.
D2(중증환자): 그래프에서 가격절편 20, 수량절편 20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P = 20 - Q_2$, 즉 $Q_2 = 20 - P$이다. 가격이 5일 때 $Q_2 = 15$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수요의 가격탄력성 $\varepsilon = \frac{dQ}{dP} \times \frac{P}{Q}$를 사용한다. 직선 수요함수에서 $\frac{dQ}{dP}$는 기울기의 역수이며, 여기서는 두 곡선 모두 $Q = a - P$ 형태이므로 $\frac{dQ}{dP} = -1$로 동일하다.

계산 과정

보통사람(D1): $\varepsilon_1 = (-1) \times \frac{5}{5} = -1$
중증환자(D2): $\varepsilon_2 = (-1) \times \frac{5}{15} = -\frac{1}{3}$
두 값을 비교하면 $|\varepsilon_1| = 1 > |\varepsilon_2| = \frac{1}{3}$이므로, 가격 5에서 보통사람의 수요가 중증환자의 수요보다 가격에 더 탄력적이다.
독점병원이 이윤을 극대화하며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경우(3차 가격차별), 탄력성이 작은(비탄력적인) 집단에는 더 높은 가격을, 탄력성이 큰(탄력적인) 집단에는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이윤극대화 조건이다. 여기서는 중증환자의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므로 독점병원은 중증환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④의 진위 판단: 탄력성의 정의에서 $\varepsilon = \frac{\%\Delta Q}{\%\Delta P}$이므로 $\%\Delta Q = \varepsilon \times \%\Delta P$이다. 가격 변화율($\%\Delta P$)이 두 집단에서 동일하더라도, 보통사람은 $\varepsilon_1 = -1$을, 중증환자는 $\varepsilon_2 = -\frac{1}{3}$을 곱해야 하므로 수요량의 변화율($\%\Delta Q$)은 서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 오르면 보통사람의 수요량은 10% 감소하지만, 중증환자의 수요량은 약 3.3%만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O: 계산 과정에서 구한 대로 보통사람은 가격 5에서 탄력성이 −1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② O: 계산 과정에서 구한 대로 중증환자는 가격 5에서 탄력성이 −1/3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③ O: 독점병원은 탄력성이 작은(더 비탄력적인) 중증환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이윤극대화에 부합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④ X: 가격 변화율이 같아도 탄력성이 서로 다르므로(−1과 −1/3) 수요량의 변화율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하다'는 서술은 틀린 표현이며, 옳게 고치면 '탄력성이 다르므로 수요량의 변화율도 서로 다르다'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①·②·③은 모두 그래프에서 곡선을 정확히 읽고 탄력성 공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참으로 확인되는 진술이라 헷갈릴 이유가 적다. 다만 ④를 고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가격 변화율이 같으면 수량 변화율도 같다'는 문장을 탄력성 개념과 연결하지 못하고 직관적으로 맞는 말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탄력성이 다른 두 수요곡선에서는 같은 비율의 가격 변화가 서로 다른 비율의 수량 변화를 낳는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그래프로 주어진 직선형 수요곡선 문제는 먼저 가격절편과 수량절편을 읽어 $P = a - Q$ 형태의 식을 세우고, 특정 가격에서의 수량을 구한 뒤 탄력성 공식 $\varepsilon = \frac{dQ}{dP} \times \frac{P}{Q}$에 대입한다. 이후 '가격 변화율과 수량 변화율의 관계'를 묻는 선지가 나오면 탄력성 정의식 $\%\Delta Q = \varepsilon \times \%\Delta P$를 직접 떠올려, 탄력성이 다르면 같은 가격 변화율에서도 수량 변화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바로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직선 수요함수 $Q = a - P$에서 $\frac{dQ}{dP} = -1$이며, 탄력성은 그 점의 $\frac{P}{Q}$ 값에 따라 달라진다.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서는 탄력성이 작은(비탄력적인) 집단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탄력성이 큰(탄력적인) 집단일수록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탄력성이 다르면 같은 가격 변화율에서도 수요량의 변화율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8. 효용함수가 $u(x,y)=x+y$인 소비자가 있다. $p_x=2$, $p_y=3$일 때, 이 소비자의 소득소비곡선(income-consumption curve)을 바르게 나타낸 식은?

① $x=0$

② $y=0$

③ $y=\frac{2}{3}x$

④ $y=\frac{3}{2}x$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효용함수가 $u(x,y)=x+y$인 완전대체재(perfect substitutes) 상황에서 상대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한 재화만 구매하는 구석해(corner solution)가 성립함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소득이 변해도 그 구석해 형태가 유지되어 소득소비곡선이 좌표축 위의 직선(축 자체)으로 나타남을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효용함수 $u(x,y)=x+y$이므로 x재와 y재는 완전대체재이며 한계효용은 각각 $MU_x=1$, $MU_y=1$로 항상 동일하다. 가격은 $p_x=2$, $p_y=3$이다. 소득소비곡선은 가격을 고정한 채 소득 I를 변화시킬 때 소비자균형점 (x^*,y^*)의 궤적이다.

사용할 공식

완전대체재의 한계대체율은 $MRS_{xy}=\frac{MU_x}{MU_y}=1$로 일정하다. 예산선의 기울기(가격비)는 $\frac{p_x}{p_y}$이다.
완전대체재에서는 MRS_{xy}와 $\frac{p_x}{p_y}$를 비교하여, $MRS_{xy}>\frac{p_x}{p_y}$이면 x재만 소비하는 구석해($y=0$)가, $MRS_{xy}<\frac{p_x}{p_y}$이면 y재만 소비하는 구석해($x=0$)가 성립한다.

계산 과정

가격비를 계산하면 $\frac{p_x}{p_y}=\frac{2}{3}$이다. 한계대체율 $MRS_{xy}=1$과 비교하면 $1>\frac{2}{3}$이므로 $MRS_{xy}>\frac{p_x}{p_y}$이다. 이는 소비자가 y재 1단위를 포기할 때 얻는 한계효용(=1)이, x재 1단위를 더 사는 데 필요한 지출을 y재 지출로 환산했을 때의 효용보다 크다는 의미이며, 직관적으로는 효용 1단위당 지출액이 x재는 2, y재는 3이므로 더 저렴한 x재만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소득 전액을 x재 구매에 사용하고 y재는 전혀 구매하지 않으며, 이 결과는 소득 I의 크기와 무관하게 항상 성립한다. 즉 소득소비곡선은 $y=0$(가로축)으로 나타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0: x재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x재만 소비하므로 틀린 표현이다 → 올바른 표현은 y = 0이다.
② y = 0: 가격비 2/3가 한계대체율 1보다 작아 x재만 구매하는 구석해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소득소비곡선은 y = 0이다. 옳다.
③ y = (2/3)x: 완전대체재는 무차별곡선이 직선이라 접점이 아닌 구석해로 결정되므로, 가격비 기울기를 갖는 내부해 형태의 직선은 성립하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은 y = 0이다.
④ y = (3/2)x: 가격비의 역수를 기울기로 잘못 적용한 형태로, 이 역시 완전대체재의 구석해 특성과 맞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은 y = 0이다.

오답 포인트

완전대체재 문제에서는 접점 조건(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의 접점)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③, ④처럼 가격비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답으로 고르는 실수가 흔하다.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 자체가 직선이므로 접점이 아니라 두 직선의 기울기(한계대체율과 가격비)를 비교해 어느 재화만 전부 소비할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용함수가 $u = ax + by$ 꼴로 주어지면 완전대체재임을 즉시 인지하고, $MRS = \frac{a}{b}$와 $\frac{p_x}{p_y}$를 비교한다. $MRS > \frac{p_x}{p_y}$이면 x재만 소비($y = 0$), $MRS < \frac{p_x}{p_y}$이면 y재만 소비($x = 0$)하며, 이 결과는 소득이 얼마이든 변하지 않으므로 소득소비곡선은 축 위의 직선이 된다.

암기 포인트

완전대체재는 한계대체율이 일정하므로 그 값과 가격비를 비교해 저렴한 재화만 전량 구매하는 구석해가 되고, 이때 소득소비곡선은 그 재화의 축(다른 재화의 소비량 = 0) 위에 놓이는 직선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9. 다음 표는 각국의 시장환율과 빅맥가격을 나타낸다. 빅맥가격으로 구한 구매력평가 환율을 사용할 경우, 옳은 것은? (단, 시장환율의 단위는 '1달러' 당 각국 화폐로 표시되며, 빅맥가격의 단위는 '각국 화폐'로 표시된다)

국가 (화폐 단위)	시장환율	빅맥가격
미국(달러)	1	5
브라질(헤알)	2	12
한국(원)	1,000	4,000
중국(위안)	6	18
러시아(루블)	90	90

① 브라질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다.

② 한국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저평가된다.

③ 중국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다.

④ 러시아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저평가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빅맥가격을 이용하여 국가별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시장환율과 비교하여 각국 화폐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조건 정리

시장환율의 단위는 1달러 당 각국 화폐이고, 빅맥가격의 단위도 각국 화폐이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동일한 상품(빅맥)은 어느 나라에서나 달러 기준으로 같은 값을 가져야 하므로, 빅맥가격을 이용한 이론적 환율(구매력평가 환율)을 각국 빅맥가격과 미국 빅맥가격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이 문항이 묻는 것은 각국 화폐를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했을 때 시장환율로 평가한 경우보다 고평가되는지 저평가되는지이다. 화폐 1단위의 가치는 환율의 역수이므로(1달러를 얻는 데 필요한 자국 화폐가 적을수록 화폐가치가 크다), 구매력평가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작으면($e_{PPP} < e_{market}$) 구매력평가로 평가한 화폐가치가 시장환율로 평가한 것보다 커서 고평가로 판단하고, 구매력평가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크면($e_{PPP} > e_{market}$) 저평가로 판단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구매력평가 환율은 $e_{PPP} = \frac{P_{local}}{P_{US}}$로 구한다. 여기서 P_{local}은 해당국의 빅맥가격, P_{US}는 미국의 빅맥가격(5달러)이다. 판정 기준은 $e_{PPP} < e_{market}$이면 (구매력평가로 평가할 때) 고평가, $e_{PPP} > e_{market}$이면 저평가이다.

계산 과정

미국을 기준으로 각국의 구매력평가 환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브라질: $e_{PPP} = \frac{12}{5} = 2.4$, 시장환율은 2이다. $e_{PPP}(2.4) > e_{market}(2)$이므로 브라질 헤알화는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것으로 판정된다.
한국: $e_{PPP} = \frac{4{,}000}{5} = 800$, 시장환율은 1,000이다. $e_{PPP}(800) < e_{market}(1{,}000)$이므로 원화는 시장환율 대비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된 것으로 판정된다.
중국: $e_{PPP} = \frac{18}{5} = 3.6$, 시장환율은 6이다. $e_{PPP}(3.6) < e_{market}(6)$이므로 위안화는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 것으로 판정된다.
러시아: $e_{PPP} = \frac{90}{5} = 18$, 시장환율은 90이다. $e_{PPP}(18) < e_{market}(90)$이므로 루블화는 시장환율 대비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된 것으로 판정된다.

선지 판단

① 브라질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다 → X. 계산 결과 브라질의 구매력평가 환율(2.4)이 시장환율(2)보다 크므로 브라질 헤알화는 오히려 저평가된 것으로 판정된다. '고평가'라는 서술이 틀렸다.
② 한국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저평가된다 → X. 한국의 구매력평가 환율(800)이 시장환율(1,000)보다 작으므로 원화는 오히려 고평가된 것으로 판정된다. '저평가'라는 서술이 틀렸다.
③ 중국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다 → O. 중국의 구매력평가 환율(3.6)이 시장환율(6)보다 작으므로 위안화는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 것으로 판정되며, 서술과 일치한다.
④ 러시아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저평가된다 → X. 러시아의 구매력평가 환율(18)이 시장환율(90)보다 작으므로 루블화는 오히려 고평가된 것으로 판정된다. '저평가'라는 서술이 틀렸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구매력평가 환율과 시장환율의 대소 비교 방향을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올바른 기준은 구매력평가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작으면 고평가, 크면 저평가인데, 이를 거꾸로(크면 고평가, 작으면 저평가) 적용하면 브라질만 고평가로, 한국·중국·러시아를 저평가로 잘못 판단하여 ①을 정답으로 고르게 된다. 또한 표의 시장환율과 빅맥가격 두 열을 헷갈려 계산에 사용하는 실수도 주의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국의 빅맥가격을 미국의 빅맥가격(5)으로 나누어 구매력평가 환율을 구한다. 그다음 이 값을 표에 주어진 시장환율과 비교하여, 구매력평가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작으면 고평가, 크면 저평가로 표시한다. 네 선지 중 계산 결과와 서술 방향(고평가/저평가)이 일치하는 선지 하나만 옳다.

암기 포인트

구매력평가 환율 e_PPP=자국 상품가격기준국 상품가격. 판정 기준: $e_{PPP} < e_{market}$이면 (구매력평가로 평가할 때) 고평가, $e_{PPP} > e_{market}$이면 저평가. 화폐가치는 환율의 역수이므로 구매력평가 환율이 작을수록 그 화폐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NoteBase

문 10. 지급준비율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② 은행들은 법정지급준비금 이상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다.

③ 100% 지급준비제도 하에서는 지급준비율이 1이므로 통화승수는 0이 된다.

④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본원통화의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도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지급준비율과 통화승수의 관계, 그리고 지급준비율 변화가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선지의 사실관계를 하나씩 점검해야 한다.

조건 정리

지급준비율(reserve ratio, z)은 예금액 중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두고 나머지는 대출 등으로 운용하는 부분지급준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통화승수는 본원통화 1단위가 통화량을 몇 배로 창출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사용할 공식

민간의 현금통화비율을 무시하고 지급준비율만 고려하는 단순모형에서 통화승수 m은 $m = \frac{1}{z}$ 이며, 통화량 M은 본원통화 H에 대해 $M = m \times H$ 로 결정된다.

계산 과정

100% 지급준비제도는 지급준비율 $z = 1$인 경우이다.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m = \frac{1}{z} = \frac{1}{1} = 1$ 이 되어 통화승수는 1이지 0이 아니다. 즉 은행이 예금 전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면 신용창조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 통화승수가 최소값인 1이 되는 것이며, 이는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같아진다는 의미이지 통화량이 0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편 지급준비율 z이 커지면 통화승수 $m = 1/z$는 작아지므로, 본원통화 H가 고정되어 있어도 $M = m \times H$에 의해 통화량 M은 줄어든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우리나라는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O.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지급준비제도가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
② 은행들은 법정지급준비금 이상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다 → O. 법정지급준비금은 최소 보유 의무량일 뿐이므로 은행은 그 이상을 자발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③ 100% 지급준비제도 하에서는 지급준비율이 1이므로 통화승수는 0이 된다 → X. 지급준비율이 1이면 통화승수는 $1/1 = 1$이 되는 것이지 0이 되는 것이 아니다. 통화승수가 0이 되려면 분모인 지급준비율이 무한대가 되어야 하므로 이는 성립할 수 없는 값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으로 정리하면, 통화승수는 0이 된다 → 통화승수는 1이 된다(신용창조가 없어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같아진다).
④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본원통화의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도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 O. 지급준비율 상승은 통화승수를 하락시키므로 본원통화가 그대로여도 통화량 $M = m \times H$은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통화승수 공식 $m = 1/z$에서 지급준비율이 커질수록 통화승수는 작아지지만 0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지급준비율이 1(100%)인 극단적인 경우에도 통화승수의 최솟값은 1이며, 이는 신용창조가 전혀 없어 은행이 통화량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통화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급준비율 관련 문제에서는 먼저 통화승수 공식 $m = 1/z$를 떠올리고, 극단값(지급준비율 0 또는 1)을 대입해 통화승수가 어떤 값이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본다. 지급준비율이 1일 때 통화승수가 0이라는 서술이 나오면 곧바로 오류임을 의심한다.

암기 포인트

통화승수 $m = 1/z$이며, 지급준비율 $z = 1$(100% 지급준비제도)일 때 통화승수는 0이 아니라 1이다.
지급준비율이 오르면 통화승수는 하락하여 본원통화가 일정해도 통화량은 감소한다.

NoteBase

문 11. A국에서는 고전학파의 이론인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현재 A국의 실질GDP는 20,000, 물가수준은 30, 그리고 통화량은 600,000일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A국에서 화폐의 유통속도는 1이다.

②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증가시켰을 때, 물가는 10% 상승한다.

③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증가시켰을 때, 명목GDP는 10% 증가한다.

④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4% 증가시켰을 때, 실질GDP는 4% 증가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교환방정식)을 이용해 유통속도를 구하고, 화폐수량설의 핵심 함의인 화폐의 중립성(고전적 이분성)까지 이어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화량 변화가 물가·명목GDP·실질GDP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실질GDP $Y = 20{,}000$, 물가수준 $P = 30$, 통화량 $M = 600{,}000$이다.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이 성립하므로 유통속도 V는 일정하고, 화폐의 중립성에 따라 통화량 변화는 실질변수(실질GDP)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명목변수(물가, 명목GDP)만 같은 비율로 변화시킨다.

사용할 공식

교환방정식(화폐수량설): $MV = PY$. 이를 변형하면 유통속도 $V = \frac{PY}{M}$이다. 각 변수를 변화율로 나타내면 $\%\Delta M + \%\Delta V = \%\Delta P + \%\Delta Y$이며, 고전학파 세계에서는 V와 Y가 통화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므로(화폐의 중립성), 통화량 증가율은 그대로 물가 상승률로 나타나고 실질GDP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계산 과정

유통속도: $V = \frac{PY}{M} = \frac{30 \times 20{,}000}{600{,}000} = \frac{600{,}000}{600{,}000} = 1$이다. 통화량이 10% 증가하는 경우, V와 Y가 불변이므로 $MV = PY$에서 P가 10% 상승해야 등식이 유지된다. 따라서 물가도 10% 상승하고, 명목GDP($= PY$)도 물가 상승률만큼 10% 증가한다. 통화량이 4% 증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질GDP Y는 변하지 않고 물가만 4% 상승하며, 실질GDP는 그대로 20,000으로 유지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A국에서 화폐의 유통속도는 1이다 → 옳다. $V = \frac{PY}{M} = \frac{30 \times 20{,}000}{600{,}000} = 1$로 계산되어 선지 내용과 일치한다.
②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증가시켰을 때, 물가는 10% 상승한다 → 옳다. 화폐수량설에서 V와 Y가 일정하므로 통화량 증가율이 그대로 물가 상승률로 이어진다.
③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증가시켰을 때, 명목GDP는 10% 증가한다 → 옳다. 명목GDP는 PY인데 Y는 불변이고 P가 10% 상승하므로 명목GDP도 10% 증가한다.
④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4% 증가시켰을 때, 실질GDP는 4% 증가한다 →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화폐의 중립성에 따라 통화량 변화는 실질GDP와 같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통화량이 4% 증가해도 실질GDP는 20,000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물가만 4% 상승한다.

오답 포인트

통화량 변화가 실질GDP까지 함께 변화시킨다고 착각하면 ④를 옳은 선지로 오판하게 된다.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가 명목변수(물가, 명목GDP)에만 영향을 주고 실질변수(실질GDP, 실질임금 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화폐의 중립성(고전적 이분성)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MV = PY$에 주어진 숫자를 대입해 유통속도부터 구한다. 이후 통화량이 몇 % 변했다는 선지가 나오면, 고전학파 세계에서는 유통속도와 실질GDP가 항상 고정값이라는 점을 이용해 물가와 명목GDP만 같은 비율로 변한다고 판단하고, 실질GDP가 변한다고 서술된 선지는 화폐의 중립성 위반이므로 옳지 않은 선지로 지목한다.

암기 포인트

교환방정식 $MV = PY$, 유통속도 $V = \frac{PY}{M}$.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는 통화량 변화율 = 물가 상승률 = 명목GDP 증가율이며, 실질GDP는 화폐의 중립성에 의해 통화량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NoteBase

문 12.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②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③ 가격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가격을 의미한다.

④ 가격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의 정의와 최저임금제(가격하한제)와의 구분, 그리고 규제가 실제로 시장에 구속력을 갖는 조건(binding 여부)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가격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실제로 구속력을 가지며 초과수요와 같은 규제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개념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는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상한(최고가격)을 정부가 정해두는 규제로,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구속력을 갖고 초과수요(공급부족)를 발생시킨다. 반대로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의 하한(최저가격)을 정하는 규제로,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예이며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구속력을 갖고 초과공급(공급과잉)을 발생시킨다. 규제가격이 균형가격 범위 안쪽(상한은 균형보다 높게, 하한은 균형보다 낮게)에 설정되면 규제가 실제 거래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비구속적(non-binding) 상태가 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 X,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그 이하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에 해당한다.
②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 X, 가격상한제가 구속력을 가지려면 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초과수요(공급부족)가 발생한다. 초과공급은 가격하한제가 구속력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③ 가격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가격을 의미한다. → X, 가격상한은 판매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을 의미한다.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가격을 뜻하는 것은 가격하한이다.
④ 가격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 O, 가격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시장은 규제가 없을 때와 동일하게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규제가 실제로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는 비구속적 상태가 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혼동하거나, '상한'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규제효과(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가 발생한다고 단정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 규제가격과 시장균형가격의 상대적 위치(규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확인해야 실제로 규제가 작동하는지(구속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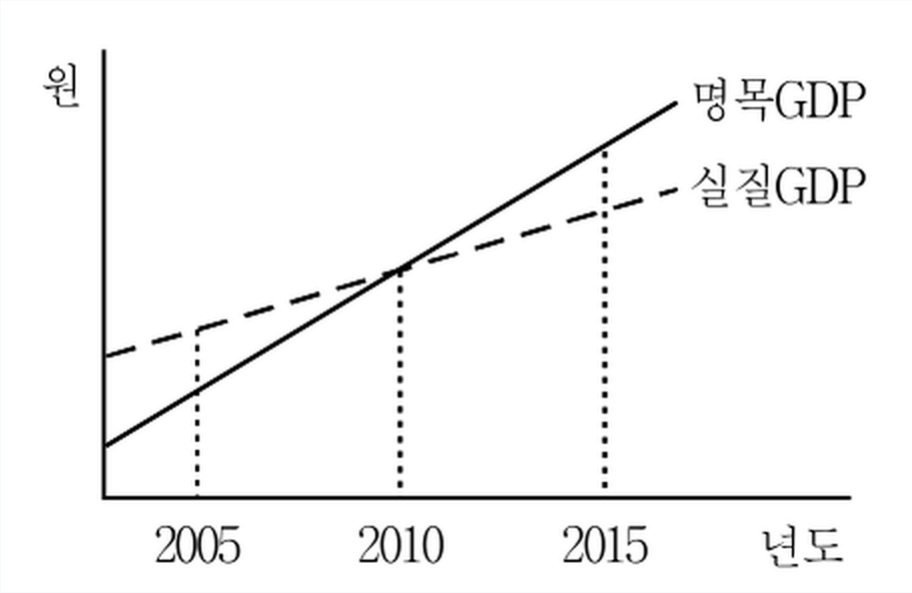
먼저 문제에서 다루는 규제가 상한(최고가격, 예: 임대료 규제)인지 하한(최저가격, 예: 최저임금제)인지를 구분한다. 다음으로 그 규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확인한다. 상한은 균형보다 낮을 때, 하한은 균형보다 높을 때에만 구속력을 가지며 규제효과(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가 나타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비구속적 규제가 된다.

암기 포인트

가격상한(최고가격)=낮게 설정될 때 구속적, 초과수요 발생. 가격하한(최저가격, 예: 최저임금제)=높게 설정될 때 구속적, 초과공급 발생. 규제가격이 균형가격 반대쪽에 있으면 비구속적이라 실효성이 없다.

NoteBase

문 13. 다음 그림은 A국의 명목GDP와 실질GDP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국의 명목GDP와 실질GDP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①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② 2005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큰 값을 가진다.

③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물가는 상승하였다.

④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진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명목GDP와 실질GDP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GDP디플레이터의 정의와 기준연도의 의미, 그리고 물가 및 경제성장률 판단을 그래프 위에서 읽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므로, 두 그래프 중 어느 쪽이 더 위에 있는지가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큰지 작은지를 결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 O. 기준연도는 명목GDP와 실질GDP가 같아지는 해로, 이때 GDP디플레이터는 100이 된다. 그래프에서 두 직선이 교차하는 시점이 2010년이므로 기준연도는 2010년이 맞다.
② 2005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큰 값을 가진다. → X. 2005년에는 실질GDP 그래프가 명목GDP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다. 즉 실질GDP > 명목GDP이므로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100)는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100보다 큰 값을 가진다'는 틀린 설명이며, 옳은 표현은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이다.
③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물가는 상승하였다. → O. 2010년에는 두 그래프가 일치(디플레이터=100)하지만 2015년에는 명목GDP가 실질GDP보다 위에 있어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커진다. 디플레이터가 100에서 100보다 큰 값으로 커졌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④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진다. → O. 경제성장률은 실질GDP의 증가율로 측정한다. 그래프에서 실질GDP 직선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므로 실질GDP가 계속 증가했고, 따라서 이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진다.

오답 포인트

명목GDP와 실질GDP의 크기 비교와 GDP디플레이터의 크기를 반대로 연결하기 쉽다. 실질GDP가 명목GDP보다 크면(그래프에서 더 위에 있으면)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고, 명목GDP가 실질GDP보다 크면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는 관계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물가 상승 여부는 디플레이터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디플레이터가 시간에 따라 커졌는지(즉 명목GDP가 실질GDP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두 직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 기준연도(디플레이터=100)를 확정한다. 그다음 각 시점에서 명목GDP선과 실질GDP선 중 어느 것이 위에 있는지를 보고, 명목이 위이면 디플레이터>100, 실질이 위이면 디플레이터<100으로 판단한다. 두 시점 사이의 물가 상승·하락은 디플레이터 값이 시간이 지나며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로, 경제성장률의 양(+)·음(-)은 실질GDP선이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로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100이며, 기준연도에서는 명목GDP=실질GDP이므로 디플레이터=100이다. 그래프에서 명목GDP선이 실질GDP선보다 위에 있으면 디플레이터>100(물가가 기준연도보다 상승), 아래에 있으면 디플레이터<100(물가가 기준연도보다 하락)이다. 경제성장률은 오직 실질GDP의 증가율로만 측정한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재화시장만을 고려한 케인지안 폐쇄경제 거시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지출은 $E = C + I + G$이며, 여기서 E는 총지출,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이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총소득(Y)과 총지출(E)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와 정부지출은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I = \bar{I}$이고 $G = \bar{G}$이다. 소비함수는 $C = 0.8(Y - \bar{T})$이고 $\bar{T}$는 세금이며,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① $\bar{I} = 100, \bar{G} = 50, \bar{T} = 50$이면 총소득은 550이다.
② 정부지출을 1 단위 증가시키면 발생하는 총소득 증가분은 5이다.
③ 세금을 1 단위 감소시키면 발생하는 총소득 증가분은 4이다.
④ 투자를 1 단위 증가시키면 발생하는 총소득 증가분은 4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케인지안 폐쇄경제 재화시장 모형에서 균형국민소득식을 세우고, 정부지출승수·조세승수·투자승수를 각각 구분해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의 크기가 같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다.

조건 정리

총지출 $E = C + I + G$, 균형조건 $Y = E$, 소비함수 $C = 0.8(Y - \bar{T})$, 투자와 정부지출은 외생적으로 고정된 $I = \bar{I}$, $G = \bar{G}$, 조세도 고정된 $\bar{T}$이다.

사용할 공식

균형조건에 소비함수를 대입해 Y를 $\bar{I}, \bar{G}, \bar{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 $Y = 0.8(Y - \bar{T}) + \bar{I} + \bar{G}$에서 Y항을 좌변으로 모으면 $0.2Y = \bar{I} + \bar{G} - 0.8\bar{T}$이므로 $Y = 5\bar{I} + 5\bar{G} - 4\bar{T}$가 된다. 이 식에서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는 각각 5, 조세승수는 -4이다.

계산 과정

① $\bar{I} = 100, \bar{G} = 50, \bar{T} = 50$을 대입하면 $Y = 5(100) + 5(50) - 4(50) = 500 + 250 - 200 = 550$이 되어 550이 맞다.
② 정부지출 승수는 $\frac{\Delta Y}{\Delta G} = 5$이므로 정부지출을 1 단위 늘리면 총소득은 5만큼 증가한다.
③ 조세 승수는 $\frac{\Delta Y}{\Delta T} = -4$이므로 세금을 1 단위 줄이면 총소득은 4만큼 증가한다.
④ 투자 승수는 $\frac{\Delta Y}{\Delta I} = 5$이므로 투자를 1 단위 늘리면 총소득은 5만큼 증가하며, 4가 아니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bar{I}=100, \bar{G}=50, \bar{T}=50$을 대입한 계산 결과 총소득이 550으로 옳다.
② O — 정부지출승수는 5이므로 정부지출을 1 단위 증가시키면 총소득은 5만큼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③ O — 조세승수는 -4이므로 세금을 1 단위 감소시키면 총소득이 4만큼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④ X — 투자승수도 정부지출승수와 마찬가지로 5이므로, 투자를 1 단위 증가시키면 총소득은 4가 아니라 5만큼 증가한다. 틀린 표현 '증가분은 4이다' → 올바른 표현 '증가분은 5이다'.

오답 포인트

이 모형에서 투자와 정부지출은 모두 총지출식 $E=C+I+G$에 동일한 형태(외생적 상수항)로 더해지므로 승수 크기가 서로 같다. 이를 간과하고 투자승수를 조세승수(-4)나 다른 값과 혼동하면 ④를 옳은 설명으로 오판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균형식을 $Y=c_0+b(Y-\bar{T})+\bar{I}+\bar{G}$ 형태로 정리한 뒤 Y를 좌변으로 모아 $Y=\frac{1}{1-b}(\bar{I}+\bar{G}-b\bar{T})$ 꼴로 만들면,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는 항상 $\frac{1}{1-b}$로 같고 조세승수는 $-\frac{b}{1-b}$로 부호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지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한계소비성향이 $b=0.8$일 때 투자승수=정부지출승수=$\frac{1}{1-0.8}=5$, 조세승수=$-\frac{0.8}{1-0.8}=-4$로,
투자·정부지출승수는 항상 동일하고 조세승수는 그보다 절댓값이 작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NoteBase

문 15. 다음 표는 A국이 소비하는 빵과 의복의 구입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물가지수가 라스파이레스 지수(Laspeyres index)인 경우, 2010년과 2011년 사이의 물가상승률은? (단,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빵		의복	
	구입량	가격	구입량	가격
2010년	10만 개	1만 원	5만 벌	3만 원
2011년	12만 개	3만 원	6만 벌	6만 원

① 140%

② 188%

③ 240%

④ 288%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의 계산 공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을 혼동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기준연도(2010년)의 구입량(수량)을 가중치로 고정한 뒤, 비교연도의 가격을 대입해 계산한다.

조건 정리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2010년: 빵 구입량 10만 개, 가격 1만 원 / 의복 구입량 5만 벌, 가격 3만 원. 2011년: 빵 가격 3만 원 / 의복 가격 6만 원(구입량은 라스파이레스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 $L = \frac{\sum P_1 Q_0}{\sum P_0 Q_0} \times 100$ (단, P_0, Q_0은 기준연도 가격·구입량, P_1은 비교연도 가격).
물가상승률은 지수 자체가 아니라 $(L - 10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분모(기준연도 지출액) $\sum P_0Q_0$ = 빵 1만 원×10만 개 + 의복 3만 원×5만 벌 = 10억 원 + 15억 원 = 25억 원.
분자(기준연도 구입량에 2011년 가격을 곱한 지출액) $\sum P_1Q_0$ = 빵 3만 원×10만 개 + 의복 6만 원×5만 벌 = 30억 원 + 30억 원 = 60억 원.
라스파이레스 지수 $L = \frac{60}{25} \times 100 = 240$.
물가상승률 = $L - 100 = 240 - 100 = 140\%$.

선지 판단

① 140% — 옳다. 라스파이레스 지수 240에서 기준치 100을 뺀 물가상승률이 140%이다.
② 188% — 틀리다. 가중치를 기준연도 구입량이 아닌 다른 값(예: 구입량 평균이나 비교연도 값을 섞은 계산)으로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으로, 라스파이레스 공식과 맞지 않는다.
③ 240% — 틀리다. 계산된 라스파이레스 지수 값(240) 자체를 물가상승률로 착각한 값이다. 지수 240은 기준연도 대비 물가 '수준'이 2.4배라는 뜻이고, 상승'률'은 여기서 100을 뺀 140%이다.
④ 288% — 틀리다. 기준연도 구입량 대신 비교연도 구입량을 가중치로 써서 분자·분모를 잘못 구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으로, 라스파이레스 지수의 정의(기준연도 수량 고정)에 어긋난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지수 값(240)과 상승률(140%)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가지수가 240이라는 것은 물가 수준이 기준연도의 2.4배(240%)라는 뜻이며, 물가가 '상승한 정도'는 여기서 100을 뺀 140%p이다. 또한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반드시 기준연도(2010년)의 구입량을 가중치로 고정해서 계산해야 하며, 비교연도(2011년)의 구입량을 쓰면 파셰 지수(Paasche index)의 개념과 혼동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라스파이레스 지수 문제가 나오면 먼저 기준연도의 가격·구입량과 비교연도의 가격을 표에서 구분해 표시한다. 분모는 '기준연도 가격×기준연도 구입량', 분자는 '비교연도 가격×기준연도 구입량'으로 고정하고 계산한 뒤, 문제가 묻는 것이 '지수 값'인지 '상승률(변화율)'인지를 마지막에 다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라스파이레스 지수 $L = \frac{\sum P_1Q_0}{\sum P_0Q_0} \times 100$ — 가중치는 항상 기준연도(0기) 구입량으로 고정. 물가상승률 = 지수 − 100(%).

NoteBase

문 16. A국은 한 단위의 노동으로 하루에 쌀 5kg을 생산하거나 옷 5벌을 생산할 수 있다. B국은 한 단위의 노동으로 하루에 쌀 4kg을 생산하거나 옷 2벌을 생산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쌀과 옷의 교환비율이 아닌 것은? (단, A국과 B국의 부존노동량은 동일하다)

① (P_쌀)/(P_옷) = 0.9

② (P_쌀)/(P_옷) = 0.6

③ (P_쌀)/(P_옷) = 0.4

④ (P_쌀)/(P_옷) = 0.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비교우위 무역에서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성립하려면 세계시장의 교환비율(상대가격)이 두 나라 각각의 국내 기회비용(자급자족 가격)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는 원리를 묻는다. 어느 한쪽의 국내 가격비와 같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느 한 나라도 무역에서 이득을 보지 못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건 정리

A국: 노동 1단위로 쌀 5kg 또는 옷 5벌 생산 가능. B국: 노동 1단위로 쌀 4kg 또는 옷 2벌 생산 가능. 두 나라의 부존노동량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사용할 공식

한 나라의 국내(자급자족) 쌀 1단위의 기회비용은 (P_쌀)/(P_옷)=동일 노동으로 생산 가능한 옷의 양동일 노동으로 생산 가능한 쌀의 양으로 구한다. 무역이 성립하려면 두 나라의 국내 기회비용 중 더 작은 값과 더 큰 값 사이, 즉 (A국,B국) < (P_쌀)/(P_옷) < (A국,B국) 범위에 세계 교환비율이 있어야 한다.

계산 과정

A국의 쌀 1단위 기회비용: 노동 1단위로 쌀 5kg 또는 옷 5벌을 만들 수 있으므로 (P_쌀)/(P_옷)=(5)/(5)=1이다. B국의 쌀 1단위 기회비용: 노동 1단위로 쌀 4kg 또는 옷 2벌을 만들 수 있으므로 (P_쌀)/(P_옷)=(2)/(4)=0.5이다.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지려면 0.5 < (P_쌀)/(P_옷) < 1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무역이 성립하지 않는 교환비율이 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P쌀/P옷 = 0.9 → 0.5와 1 사이에 있으므로 무역이 가능한 교환비율이다.
② P쌀/P옷 = 0.6 → 0.5와 1 사이에 있으므로 무역이 가능한 교환비율이다.
③ P쌀/P옷 = 0.4 → 0.5보다 작아 B국의 국내 기회비용보다도 쌀이 싸므로, 두 나라 모두 무역 이득을 볼 수 없는 범위 밖의 값이다.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환비율이 아니다.
④ P쌀/P옷 = 0.8 → 0.5와 1 사이에 있으므로 무역이 가능한 교환비율이다.

오답 포인트

무역이 가능한 교환비율의 범위를 구할 때 두 나라의 기회비용 중 하나만 기준으로 삼아 부등식을 세우는 실수를 하기 쉽다. 반드시 두 나라의 기회비용을 모두 구해 그 사이 구간(0.5~1)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분자와 분모를 바꿔 쌀과 옷의 비율을 거꾸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나라의 생산 가능 조합이 제시되면 먼저 각 나라의 쌀(또는 옷) 1단위 기회비용을 각각 구한다. 그 다음 두 값 중 작은 값과 큰 값을 찾아 그 사이에 있는 값이면 무역이 가능한 교환비율,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역이 불가능한 교환비율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무역 성립 조건: 세계 교환비율은 두 나라의 자급자족 가격비 사이(중간)에 위치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의 가격비와 같거나 범위 밖이면 무역 이득이 없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A기업의 장기 총비용곡선은 $TC(Q) = 40Q - 10Q^2 + Q^3$이다.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가 구분되는 생산규모는?

① $Q = 5$
② $Q = \frac{20}{3}$
③ $Q = 10$
④ $Q = \frac{40}{3}$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장기 총비용곡선이 주어졌을 때 장기평균비용(LAC)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 즉 규모의 경제(LAC 하락 구간)와 규모의 비경제(LAC 상승 구간)가 갈리는 생산규모를 구하는 문제이다. 이 경계점은 LAC곡선의 최소점이며, 이때 장기한계비용(LMC)과 LAC가 일치한다.

사용할 공식

장기평균비용은 $LAC(Q) = \frac{TC(Q)}{Q}$이다. LAC가 최소가 되는 생산량은 $\frac{dLAC}{dQ} = 0$을 만족하는 Q이며, 이는 $LMC(Q) = LAC(Q)$가 성립하는 지점과 같다. Q가 이 값보다 작으면 LAC가 감소(규모의 경제), 크면 LAC가 증가(규모의 비경제)한다.

계산 과정

총비용이 $TC(Q) = 40Q - 10Q^2 + Q^3$이므로 평균비용은 $LAC(Q) = \frac{TC(Q)}{Q} = 40 - 10Q + Q^2$이다.
이를 Q로 미분하면 $\frac{dLAC}{dQ} = -10 + 2Q$이고, 이를 0으로 두면 $-10 + 2Q = 0$에서 $Q = 5$를 얻는다.
$Q < 5$이면 $\frac{dLAC}{dQ} < 0$이라 LAC가 감소(규모의 경제)하고, $Q > 5$이면 $\frac{dLAC}{dQ} > 0$이라 LAC가 증가(규모의 비경제)하므로 $Q = 5$가 두 구간이 갈리는 경계점이다.
검산: $LAC(5) = 40 - 50 + 25 = 15$이고 장기한계비용은 $LMC(Q) = \frac{dTC}{dQ} = 40 - 20Q + 3Q^2$이므로 $LMC(5) = 40 - 100 + 75 = 15$로 $LAC(5) = LMC(5)$가 성립하여 $Q = 5$가 LAC 최소점임이 확인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Q=5$: O. $LAC'(Q)=-10+2Q=0$을 만족하는 값이자 $LAC=LMC$가 성립하는 LAC 최소점으로,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가 갈리는 생산규모이다.
② $Q=\frac{20}{3}$: X. $LAC'\left(\frac{20}{3}\right)=-10+\frac{40}{3}=\frac{10}{3}>0$이므로 이미 LAC가 증가하는 구간(규모의 비경제 영역)에 속한 값이지 경계점이 아니다.
③ $Q=10$: X. $LAC'(10)=-10+20=10>0$으로 LAC가 뚜렷이 증가하는 구간의 값이며, LAC 최소점이 아니다.
④ $Q=\frac{40}{3}$: X. $Q=\frac{40}{3}$은 총비용이 최대가 되는 변곡점 부근의 값으로 $TC'(Q)=40-20Q+3Q^2=0$의 해가 아니며, LAC 최소 조건 $-10+2Q=0$도 만족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총비용(TC)의 극값이나 한계비용(MC)이 0이 되는 지점을 규모의 경제·비경제 경계로 착각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비경제는 어디까지나 평균비용(AC)의 증감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TC를 Q로 나눈 $LAC(Q)$를 먼저 만들고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TC(Q)$를 그대로 미분해 $40-20Q+3Q^2=0$을 풀면 엉뚱한 값이 나오므로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기 총비용곡선 $TC(Q)$가 주어지고 규모의 경제·비경제 경계를 물으면, 먼저 $LAC(Q)=\frac{TC(Q)}{Q}$를 구성한 뒤 이를 Q로 미분해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 그 지점 좌우로 LAC의 증감 부호를 확인해 감소 구간(규모의 경제)과 증가 구간(규모의 비경제)이 나뉘는지 검산하면 확실하다.

암기 포인트

규모의 경제·비경제 경계 = LAC 최소점 = LAC와 LMC가 일치하는 생산량. 총비용을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균비용을 미분해서 0으로 두어야 한다.

NoteBase

문 18. 총 노동량과 총 자본량이 각각 12단위인 경제를 가정하자. 완전보완관계인 노동 1단위와 자본 2단위를 투입하여 X재 한 개를 생산하며, 완전대체관계인 노동 1단위 혹은 자본 1단위를 투입하여 Y재 한 개를 생산한다. 이 경우 X재 생산량이 6일 때, 생산의 파레토 최적 달성을 위한 Y재 생산량은?

① 8

② 6

③ 4

④ 3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완전보완관계(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로 만들어지는 재화와 완전대체관계 생산함수로 만들어지는 재화가 함께 존재할 때, 요소부존을 남김없이 모두 사용하는 배분이 생산의 파레토 최적(효율적 생산)이라는 점을 이용해 요소 배분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 노동량 12단위, 총 자본량 12단위이다. X재는 노동 1단위와 자본 2단위를 동시에 투입해야 하는 완전보완관계이므로, X재를 X단위 생산하려면 노동 X단위와 자본 $2X$단위가 그대로 소요되고 남는 요소는 버려진다. Y재는 노동 1단위 또는 자본 1단위 중 어느 것을 투입해도 한 개가 생산되는 완전대체관계이므로, 남은 노동과 남은 자본을 더한 만큼 그대로 Y재로 전환된다.

사용할 공식

X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은 X, 자본은 $2X$이다. 이를 쓰고 남은 노동은 $12 - X$, 남은 자본은 $12 - 2X$이다. 생산의 파레토 최적(요소를 남김없이 사용)을 달성하려면 이 남은 요소를 전부 Y재 생산에 투입해야 하므로 $Y = (12 - X) + (12 - 2X)$이다.

계산 과정

X재 생산량이 6이므로 X재에 소요되는 노동은 6, 자본은 $2 \times 6 = 12$이다. 총 자본량이 12단위이므로 자본은 X재 생산에 전량 소진되어 남는 자본은 $12 - 12 = 0$이다. 반면 노동은 총 12단위 중 6단위만 X재에 쓰였으므로 남는 노동은 $12 - 6 = 6$이다. 남은 노동 6단위를 완전대체 생산함수에 그대로 투입하면 Y재 생산량은 $6 + 0 = 6$이 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8: X — 자본이 X재 생산에 이미 전량 소진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노동 12단위 전체가 그대로 Y재로 전환된다고 잘못 계산한 값이다.
② 6: O — 자본은 X재 생산에 전량(12단위) 소진되어 남는 자본이 0이고, 남은 노동 6단위가 그대로 Y재로 전환되어 Y재 생산량은 6이 된다.
③ 4: X — 남은 노동과 자본을 잘못된 비율로 나누어 배분한 값으로, 완전대체 생산함수에서는 남은 요소를 나눌 필요 없이 그대로 더해 준다는 점을 놓친 값이다.
④ 3: X — 남은 노동 6단위의 절반만 Y재 생산에 반영한 값으로, 노동과 자본 중 이미 소진된 요소(자본)를 제외하고 남은 노동을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놓친 값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생산의 파레토 최적이 두 생산요소를 남김없이 모두 사용하는 배분이라는 것이다. X재가 노동보다 자본을 두 배 더 필요로 하므로, X재를 6단위 생산하면 자본이 정확히 전량 소진되고 노동만 6단위 남는다는 사실을 놓치면 남은 요소량을 잘못 계산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보완관계(레온티에프)와 완전대체관계 생산함수가 섞여 있는 문제는, 먼저 완전보완재 생산에 필요한 노동과 자본의 소요량을 계산해 전체 요소부존에서 빼고, 남은 노동과 자본을 그대로 더해 완전대체재의 생산량으로 삼는다.

암기 포인트

레온티에프(완전보완) 생산함수에서 재화를 X단위 생산하려면 각 요소가 비율대로 정확히 aX, bX만큼 소요되고 남는 요소는 낭비된다. 완전대체 생산함수에서는 서로 다른 요소라도 동일한 비율로 대체 가능하므로 남은 요소량을 단순히 합산하면 생산량이 된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2기간 소비선택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C_1, C_2) = \ln(C_1) + \beta\ln(C_2)$이다. 여기서 C_1은 1기 소비, C_2는 2기 소비, $\beta \in (0, 1)$, ln은 자연로그이다. 소비자의 1기 소득은 100이며, 2기 소득은 0이다. 1기의 소비 중에서 남은 부분은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에 대한 이자율은 r로 일정하다.

① 소비자의 예산제약식은 $C_1 + \frac{C_2}{1+r} = 100$이다.

② $\beta(1 + r) = 1$이면, 1기의 소비와 2기의 소비는 같다.

③ $\beta > \frac{1}{1+r}$이면, 1기의 소비가 2기의 소비보다 크다.

④ 효용함수가 $U(C_1, C_2) = C_1C_2^{\beta}$인 경우에도,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균형은 변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2기간 소비선택모형에서 예산제약식을 세우고 로그 효용함수의 1계조건(오일러 방정식)으로부터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상대적 크기가 β와 1/(1+r)의 비교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효용함수를 단조변환해도 최적 소비 조합이 불변함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효용함수는 $U(C_1, C_2) = \ln(C_1) + \beta\ln(C_2)$이고 $\beta \in (0, 1)$이다. 1기 소득은 100, 2기 소득은 0이며, 1기 소비 후 남은 소득은 이자율 r로 저축하여 2기에 원리금으로 소비한다.

사용할 공식

예산제약식은 $C_1 + \frac{C_2}{1+r} = 100$이다. 효용극대화의 1계조건(한계대체율=상대가격)은 $\frac{MU_1}{MU_2} = 1 + r$이며, 로그 효용함수에서 $MU_1 = \frac{1}{C_1}$, $MU_2 = \frac{\beta}{C_2}$이다.

계산 과정

1계조건을 정리하면 $\frac{1/C_1}{\beta/C_2} = 1 + r$이므로 $\frac{C_2}{C_1} = \beta(1 + r)$이다.
따라서 $\beta(1 + r) = 1$이면 $C_2 = C_1$이 되어 1기 소비와 2기 소비가 같아진다.
반대로 $\beta > \frac{1}{1+r}$이면 $\beta(1 + r) > 1$이므로 $C_2 = \beta(1 + r)C_1 > C_1$이 되어 2기 소비가 1기 소비보다 커진다. 즉 1기 소비가 2기 소비보다 큰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한편 효용함수를 $U(C_1, C_2) = C_1C_2^{\beta}$로 바꾸어도 이는 원래의 로그 효용함수 $\ln(C_1) + \beta\ln(C_2)$에 지수함수를 취한 단조증가변환에 불과하므로 무차별곡선의 형태(한계대체율)가 동일하다. 실제로 1계조건을 구하면 $\frac{MU_1}{MU_2} = \frac{C_2^{\beta}}{\beta C_1 C_2^{\beta-1}} = \frac{C_2}{\beta C_1} = 1 + r$이 되어 $C_2 = \beta(1 + r)C_1$로 앞서와 동일한 조건이 도출된다. 따라서 균형 소비 조합은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1기 소득 100, 2기 소득 0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C_1 + \frac{C_2}{1+r} = 100$이 되어 옳은 예산제약식이다. (O)
② $\beta(1+r) = 1$이면 계산 과정에서 구한 $C_2 = \beta(1+r)C_1$에 대입하여 $C_2 = C_1$이 되므로 옳다. (O)
③ $\beta > \frac{1}{1+r}$이면 $C_2 = \beta(1+r)C_1 > C_1$, 즉 2기 소비가 1기 소비보다 크다. 그런데 선지는 1기 소비가 2기 소비보다 크다고 서술하여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른 표현: "1기의 소비가 2기의 소비보다 크다" → "2기의 소비가 1기의 소비보다 크다". (X)
④ 효용함수 $C_1C_2^{\beta}$는 원래 로그 효용함수의 단조증가변환이므로 선호 순서(무차별곡선의 모양과 한계대체율)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최적 소비 조합도 그대로 유지된다. (O)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beta(1+r)$과 1의 대소 비교에서 부등호 방향을 헷갈리기 쉽다. $\beta(1+r) > 1$은 2기 소비가 더 커진다는 뜻이지 1기 소비가 커진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효용함수에 단조변환을 가해도 균형이 달라진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단조변환은 한계대체율(효용함수의 순서적 성질)을 바꾸지 않으므로 최적 소비 선택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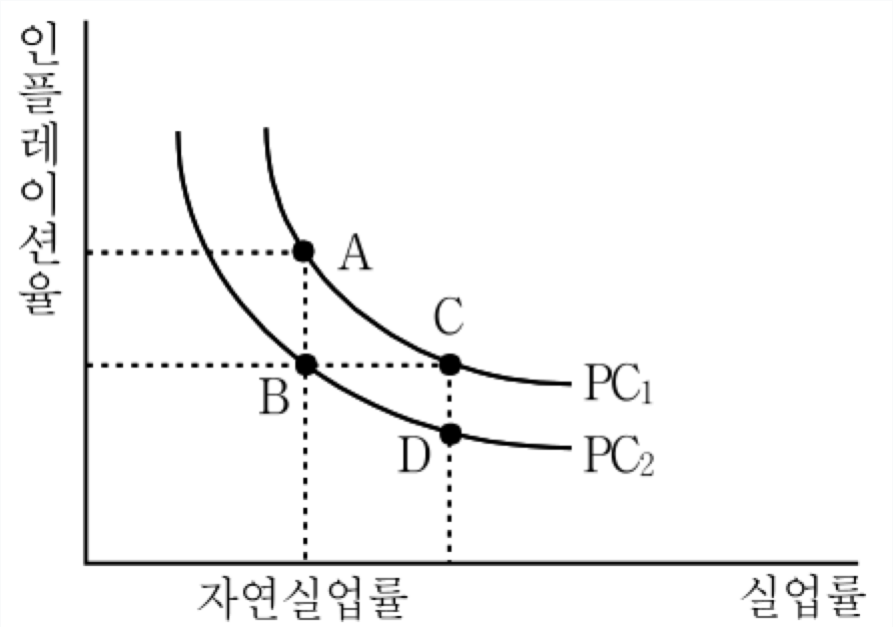
2기간 소비선택 문제가 나오면 먼저 예산제약식을 현재가치 기준으로 세운 뒤, 1계조건 $\frac{C_2}{C_1} = \beta(1+r)$을 도출한다. 이 비율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어느 기의 소비가 더 큰지를 판단하며, 효용함수가 단조변환된 형태로 주어지면 계산 없이도 균형이 동일함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로그 효용함수 $U = \ln C_1 + \beta \ln C_2$에서 최적 소비비율은 $\frac{C_2}{C_1} = \beta(1+r)$이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2기 소비가 크고, 1보다 작으면 1기 소비가 크며, 1이면 두 기 소비가 같다. 단조증가변환된 효용함수는 최적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다음 그림은 필립스곡선을 나타낸다. 현재 균형점이 A인 경우, (가)와 (나)로 인한 새로운 단기 균형점은?



(가)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이 적응적 기대를 따르고 예상하지 못한 화폐 공급의 감소가 일어났다.
(나)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이 합리적 기대를 따르고 화폐공급의 감소가 일어났다. (단, 경제주체들은 정부를 신뢰하며, 정부 정책을 미리 알 수 있다)

① (가): B, (나): C
② (가): B, (나): D
③ (가): C, (나): B
④ (가): C, (나): D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라는 서로 다른 기대형성 방식 하에서, 화폐공급 감소라는 동일한 충격이 필립스곡선 상의 균형점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이동시키는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그 충격이 예상되었는지 여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사전 인지 여부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필립스곡선(PC)의 위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곡선 자체가 아래쪽(PC1에서 PC2)으로 이동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대로면 같은 곡선 위에서만 점이 이동한다.
적응적 기대는 경제주체가 과거의 실제 인플레이션 실적을 바탕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화폐공급 감소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발생하면, 그 충격이 일어난 시점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즉시 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곡선 자체는 그대로 PC1에 머무르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지는 방향으로 같은 곡선 위를 이동한다. 즉 A에서 PC1 위의 C로 이동한다.
합리적 기대는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기대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문제의 (나)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 정책을 미리 알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화폐공급 감소라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된다. 이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통화량 감소와 함께 즉시 하락하여 필립스곡선 자체가 PC1에서 PC2로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정책이 완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실질변수인 실업률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그대로 유지된 채 인플레이션율만 낮아진 B로 이동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가) B, (나) C: (가)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므로 곡선이 이동하지 않고 같은 PC1 위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C로 가야 하는데 B로 제시되어 있어 틀렸다. (나) 역시 B가 아니라 C로 되어 있어 (가)와 (나)의 결과가 서로 뒤바뀐 오답이다.
② (가) B, (나) D: (가)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므로 곡선 이동 없이 C가 되어야 하는데 B로 되어 있어 틀렸다. (나)는 정책이 완전히 예상·신뢰되어 실업률 변화 없이 B가 되어야 하는데, 실업률이 상승한 D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③ (가) C, (나) B: (가)는 적응적 기대에서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므로 곡선 이동 없이 같은 PC1 위에서 실업률만 상승하는 C가 되고, (나)는 합리적 기대에서 정책이 완전히 예상·신뢰되어 곡선이 PC2로 이동하되 실업률은 그대로인 B가 되므로 옳은 조합이다.
④ (가) C, (나) D: (가)는 옳게 C로 되어 있으나, (나)는 정책이 완전히 예상되어 실업률에 영향이 없어야 하므로 B가 되어야 하는데 실업률이 상승한 D로 되어 있어 틀렸다.

오답 포인트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의 차이를 혼동해서 (가)와 (나)의 이동 방향을 서로 바꿔 판단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또한 (나)의 단서인 정부를 신뢰하며 정책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조건을 놓치면, 합리적 기대 하에서도 화폐공급이 줄었으니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D를 고르기 쉽다. 이 조건이 붙어 있으면 정책이 완전히 예상된 것이므로 실질변수인 실업률은 변하지 않고 자연실업률에 그대로 머무른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충격이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예상되고 신뢰된 것인지를 표시하고, 기대형성 방식이 적응적인지 합리적인지를 확인한다.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즉시 바뀌지 않으므로 곡선은 그대로 두고 같은 곡선 위에서 실업률이 변하는 점을 찾는다. 반대로 정책이 사전에 공표되고 신뢰까지 받는 상황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즉시 조정되어 곡선 자체가 이동하며,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그대로 유지된 채 인플레이션율만 바뀌는 점을 찾는다.

암기 포인트

적응적 기대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의 조합은 같은 필립스곡선 위에서의 이동으로 이어진다. 합리적 기대와 완전히 예상되고 신뢰된 정책의 조합은 필립스곡선 자체의 이동과 자연실업률 유지(정책무력성 명제)로 이어진다.

NoteBase